

파행 국감 '묘수'가 없다... 2野 대야 협상 중단

민주 '정 의장 감싸기' 국민의당 "정 의장이 물꼬 터야"

새누리 투쟁 수위 상향 vs "일단 정상화" 내부의견 균열

국정감사 파행 나흘째인 29일 야권은 대야 공세와 물밑협상 노력을 잠시 접고 '휴지기'를 갖는 모양새다. 전남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도리어 대치정국의 골이 깊어지며 출구 찾기가 더욱 복잡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에 대한 고발을 나서고 정 의장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아전 공조 흔들 = 야권은 '국감 불참은 민생 포기'라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야 공세의 강도와 협상 전략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더민주는 여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올리며 같은 당 출신인 정 의장을 감쌌으나, 국민의당은 정 의장이 대치정국 해소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날까지만 해도 3당 원내대표들 간의 물밑 협상이 이뤄졌지만, 이날은 일단 휴지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결정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장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 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내달 3일에도 복귀를 안 하면 진지하게 (강경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적당한 선에서 정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3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진행시키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단식 종식을 요구하

면 다 풀릴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을 보시고 적절한 의견표명을 통해 국회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 균열 = 국정감사 거부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은 29일에도 강경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내부 결집에 나서는 모양

새다. 당장, 정진석 원내대표가 동조 단식에 들어갔으며 새누리당 재선 의원 10여명은 정 의장의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려고 한남동 공관 앞에 몰려가기도 했다. 특히, 소속 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정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초강경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적전분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의 사과조차 얻어내지 못한 채 투쟁을 중단하거나 국감에 복귀할 경우 오히려 정국의 주도권을 잃고 야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다.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비판적인 여론은 아무래도 여당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부담이다.

적지 않은 중진 의원들이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투 트랙 대응'을 주문하고,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방위 국감을 가동하는 등 '단일대야'가 흔들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다음주에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오른쪽)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공백 어떻게 메울까

기간 연장·수요일 등 활용 모색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파행이 길어지면서 국감 공백을 만회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국정감사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으로, 이대로 파행사태가 지속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국감 일정을 사후에 보완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일단 일반 상임위 13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미래창조과학부

송통신위 등 7곳이다. 다만,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는 이날 김 의원의 참석에 따라 회의 자체는 개의됐으나 다른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의 반쪽 국감이 됐다.

국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야 대치국면이 풀려 국회 운영이 정상화된다는 가정 아래,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국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국감이 지난 26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내달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달 25일부터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감일정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감 기간 내 '수요일'에 국감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상적으로 국감 기간 중 수요일은 각 상임위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비워둬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늘(28일) 국감을 정상화해 이틀간 하지 못한 국감을 다음주와 다음다음 주 수요일에 보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현장시찰 일정이나 주말을 활용해 파행됐던 일정을 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법인세 인상 발의 여야 '증세 논쟁' 확산 전망

국민의당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증세 대열에 합류하면서 증세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확산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29명이 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은 소득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미리 본 전남도 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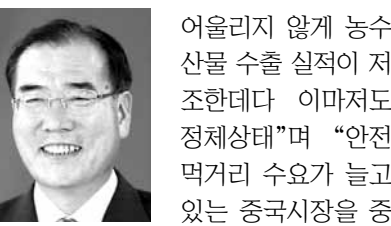
농수산물 수출 비중 0.7% '농도 전남' 무색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전남도의 전체 수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해 '농도 전남'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배포한 전남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남도 수출총액은 1688억달러로 이중 농수산물은 0.7%인 13억7천만달러에 불과했다.

농수산물 수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 2억9000만달러(전체 수출액 419억6천만달러의 0.7%) ▲2013년 2억9500만달러(414억달러의 0.71%) ▲2014년 2억8500만달러(391억달러의 0.72%) ▲2015년 2억6000만달러(305억달러의 0.85%)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는 1억7700만달러에 그쳐 159억달러의 1.1% 수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농도전남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지 않게 농수산물 수출 실적이 저조한데다 이마저도 정체상태"며 "안전 먹거리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전남 농수산물 수출마케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수산물과 함께 석유화학 및 석유, 철강 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들까지 최근 4년 사이 극심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석유화학 제품은 20.8%, 석유제품 79.1%, 철강 38%의 수출실적 감소율을 보이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석유화학 산업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수온·적조 '이중고' 양식어가 피해 397억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올 여름 고수온과 적조로 이중고를 겪은 전남 양식어가의 피해가 3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29일까지 발생한 남해안 적조로 인해 총 397억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완도군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405개 어가에서 4250만9000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해 총 327억3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장흥군에서는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넉치와 양식패류 등 31만 마리가 폐사해 18개 어가에서 8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나머지 61억7300만원 규모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남해수산연구원과 원인 규명을 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10월께 발표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전남 전북 양식어가의 82.3%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상황인 데도 피해보상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수온 피해는 보험의 주계약과 특약 모두 보장해 주지 않아 보험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적조 피해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고수온 겹쳐 전남지역 피해가 상당했다"며 "도는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피해 원인규명에 속도를 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

상수도 누수율 전국 2위... 노후 수도관 때문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전남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상수도 누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평균 11.1%보다 15%포인트 높은 26.1%로 제주(43%)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남의 전체 수도관 총연장은 1



만6258km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이 전체의 22%인 3615km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고흥의 수도관 총연장 1044km 중 노후관이 245km로 23.5%를 차지하고 누수율도 65%로 전남 지자체 중 가장 심각했다. 이어 보성군과 완도군 각각 49%, 신안군 46% 등의 순으로 누수율이 높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